

대기업집단 채무보증 ‘역대최저’ 공정위, 지배구조 투명정책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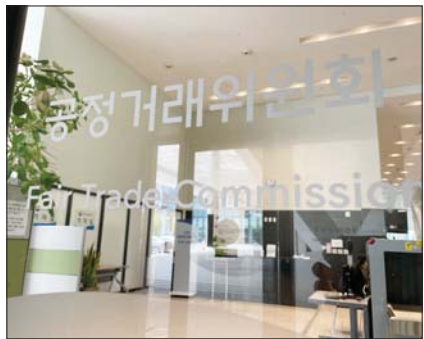
46개 상출집단 채무보증 470억
지난해 5695억 대비 91.7% 줄어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
2023년 139건→올해 97건 급감

대기업집단 간 채무보증 규모가 올해 역대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크게 감소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정책이 점차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정위는 46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2025년 5월 1일 기준, 이하 상출집단)의 계열사 간 채무보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470억원으로 지난해(5695억 원) 대비 91.7%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저 규모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집단의 과도한 여신 편중과 연쇄 부실을 막기 위해 계열사 간 채무보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 등 목적의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제한대상 채무보증은 전액 해소돼 잔존 금액이 0원이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제한제외대상 채무보증도 470억 원으로 줄었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다. 지난해(1267억 원) 대비 62.9% 감소한 수치다.

그간 채무보증 규모의 증감은 신규 지정 집단으로부터 비롯됐으나, 올해 신규지정 집단의 경우 채무보증이 없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상출집단 대상 탈법행위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탈법행위 고시)’를 통해 파생상품을 이용한 채무보증 규제 회피 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새 고시의 규율대상은 기초자산의 신용 위험만을 이전해 실질상 채무보증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하는 ▲채무증권 ▲신용변동(파산, 부도) ▲신용연계증권을 각각 기초자산으로 하는 총 수익스와프(TRS), 신용부도스와프(CDS), 신용연계채권(CLN) 등 3개 유형 파생상품이다.

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 올해 7월 31일 기준 계열사 간 TRS 거래 규모는 1조 567억원으로 지난해(1조 1667억 원)보다 9.4% 줄어, 2022년 첫 실태조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계열사 간 TRS 거래 9건 모두 기초자산이 ‘주식’으로, 탈법행위 고시 규율대상(기초자산이 채권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TRS 등 파생상품이 채무보증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이후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거래 관행을 개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익법인의 계열사 의결권 행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건수는 2023년 139건에서 올해 97건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공익법인의 의결권 행사 제한 제도는 2022년 12월 도입돼, 공익법인이 계열사의 지배력 확대에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올해 의결권 행사는 모두 법상 허용된 범위(임원 임면, 정관 변경 등) 내에서 이뤄졌으며, 피출자회사의 평균 지분율도 17.7%에서 4.2%로 낮아졌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지난 26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산업부, 유류세 인하폭 축소 상황점검

내달 1일부터 기름값 상승요인 발생
“석유제품 값 과도 상승 않도록 주의”

산업통상부는 28일 정유 4사와 알뜰공급 3사, 대한석유협회 등과 함께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열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유류세 일부 환원 조치에 따른 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제유가 하락세와 재정 여건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인해 휘발유는 L당 약 25원, 경유는 29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0원가량 인상 요인이 발생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유류세 환원 이후 석유제품 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지 않도록 업계

의 자발적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알뜰주유소 운영사들에게는 “시장 안정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산업부는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유류세 환원에 따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공급 차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창현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최근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수준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대(對)러시아 석유 제재 등으로 시장 변동성이 여전히 높다”며 “석유가격 변동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LPG·유제품·꿀 등 ‘꼼수 용량 줄이기’

제품 5개중 1개, 표시량 보다 덜 들었다

국표원, 6985개 정량표시상품 조사
용량 부적합 제품 1.1% 불과했지만
전체의 21.7% 표시용량보다 적어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는 제품 5개 중 1개는 표시된 정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슈링크플레이션(용량 줄이기)’ 논란이 합법적 꼼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는 평균량 규제를 도입하고 관리 대상을 전 제품으로 넓히는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8일 국회에서 ‘정량표시상품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조사 결과와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국표원이 최근 10년간 6985개 정량 표시상품을 조사한 결과, 법적 허용오

차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은 1.1%에 불과했다. 하지만 전체의 21.7%는 표시된 용량보다 실제 내용물이 적었고, 이 가운데 79.8%가 허용오차 범위 안에 있었다. 즉, 법은 어기지 않되 용량을 슬그머니 줄인 제품이 많다는 의미다.

품목별로는 LPG(47.6%), 유제품(42.3%), 도료(35.1%), 꿀(34.3%), 윤활유(29.6%), 음료·주류(28.4%) 등에서 ‘과소 평균실량’ 현상이 두드러졌다.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량표시제도는 단순한 계량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보호와 신뢰의 문제”라며 “평균량 규제를 법제화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개별 제품의 허용오차만 관

리하지만, 앞으로는 평균량 개념을 법에 반영해 기업이 지속적으로 표시량보다 적게 채우는 것을 막는다.

미국·유럽 등 주요국은 이미 ‘평균량제’를 운영 중이며, 국제법정계량기구(OIML)도 이를 권고하고 있다.

정부는 정량표시상품 대상을 곡류·과자·우유 등 기존 27종에서 길이·질량·부피·면적·개수 등으로 표시되는 모든 상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기능식품, 반려동물 사료, 화장품 등도 새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 샘플 조사 건수를 현행 3개에서 국제 권고 수준인 7개로 늘리고, 실제 표시량과 다를 경우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 계량법 개정 및 예산 증액도 병행 추진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농어촌공사,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

자금관리 체계화 등 추진

한국농어촌공사가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목적으로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KRC는 공사의 영문명이다.

28일 공사에 따르면 ▲자금관리 체

계를 정교하게 다듬는 ‘자금관리 체계화’와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를 위한 ‘재무역량 고도화’를 추진한다.

농어촌공사가 집행하는 예산이 매년 확대되면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자금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KRC 재무 클린 시스템’ 구축에 착수했다.

공사는 먼저 자금 흐름에 대한 모니터링과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자금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업무의 시간·입·출금이나 고객 거래 등 이상 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자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계좌의 실제 잔액과 시스템 잔액을 대조하도록 해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현장서 디저트·할랄식품 등 홍보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나흘간 경주 APEC 정상회의장 인근에서 ‘K-푸드 스테이션’을 연다. 현장에서 한국의 K-디저트 및 수출용 할랄식품 등을 홍보한다고 28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행사를 통해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과 미디어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길거리 간식과 전통 다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한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을 도모한다.

행사장에 설치된 푸드트럭에서는 K-디저트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의 감각

을 담은 다양한 디저트를 선보인다. 즉석에서 조리한 호떡을 비롯해 약과, 증편(술떡), 유과 등 전통 다과를 제공하고, 인삼편정과 등 인삼을 활용한 이색 메뉴도 함께 선보인다.

13개 식품기업이 참여해 라면·김치·쌀가공식품·음료 등 할랄인증 수출제품 90여 종도 소개된다. 일부 제품은 현장에서 증정용으로 제공돼 참가자들이 직접 시식하고 있다.

이번 K-푸드스테이션에서는 농식품부와 APEC 정상회의의 준비기획단이 공식 협찬사로 선정한 주요 식품기업들이 참여해 라면, 떡볶이, 치킨, 곰탕 등 다양한 한식 메뉴를 선보일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대두, 韓·美 관세협상 논의대상 아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국감 출석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한·미 관세협상에서 콩(대두)은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송 장관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쌀과 쇠고기도 추가 개방이 불가능한 품목으로 정부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은 관세협상 과정에서 농산물 수입 개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송 장관에게 질의했다.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장관이 외통위 국감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언급해 현장 농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혹시 농식품부가 협상 과정에서 배제된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송 장관은 “협상팀은 부총리와 산업통상부 장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농식품부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외교부 발언은 공식 입장과 다르다. 쌀·쇠고기 등 농축산물의 시장 개방 논의는 없었다”고 답했다.

/세종=김연세 기자